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의 크림 합병 결정 이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13년 12월 유로마이단 혁명이 발발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탈냉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를 뒤흔들만한 요인으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와 미국 및 서방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크림을 합병하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2000년 들어 가장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친러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로 인한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과 대응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가 현재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으나, 러시아 역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가 굳이 미국 및 서방과의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까지 우크라이나 문제를 악화시키기에는 자국의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6.20.) 발표자료

목 차

1. 유로마이단 혁명의 배경과 합의
2. 러시아의 크림 합병
3.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정세 변화에 미치는 영향
4.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향후 전망
5.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유로마이단 혁명의 배경과 합의

가. 야누코비치 정권, EU와 협력협정 체결 잠정 중단 발표 이후 친러시아 정책 강화

- 2013년 11월 21일 야누코비치 정권은 EU와의 경제 협력과 지원을 위한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
- 2013년 12월 17일 푸틴-야누코비치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가스 가격 30% 인하와 15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국채를 러시아 국부펀드로 매입하는 대규모 경제 지원 정책 발표
 -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EU와의 경제협정을 맺을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거대 식량 기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
- ※ 러시아의 경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내 친서방 세력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본격화

나. 야누코비치 정권 출범 이후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 야누코비치 정권은 집권 이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
 - 삼권분립 정신에 중대한 훼손이 있었으며, 2006년 헌법 개정 이후 강력한 위상을 정립하였던 의회와 내각의 영향력 축소 현상 발생
 - * 2012년 Freedom House는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수준을 ‘자유로운(Free)’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Partly Free)’로 하향 조정
 - 비판적 언론 매체와 반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검열 작업 강화
- 2014년 1월 16일 여당(지역당)은 일방적으로 시위에 대한 규제 강화법을 통과시키면서 반정부 시위대의 시위도 격화되는 현상 야기
- 2014년 2월 시위대와 경찰 간 유혈 충돌로 70~100명 사망하였고, 21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하였고 야누코비치는 도주함으로써 유로마이단 혁명 완성

다. 뿌리 깊은 우크라이나 내 동서(東西) 간 지역 갈등

- 우크라이나 동쪽은 러시아계를 포함한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며, 서쪽은 러시아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친서방 세력이 다수를 차지
 - 우크라이나 내 민족 구성: 우크라이나인 77.8%, 러시아계: 17.3%, 타타르인 등 소수민족 4.9%

- 제정 러시아로부터 소련 시절까지 사실상 러시아의 통치를 경험하였던 우크라이나는 같은 슬라브 족이라는 점과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인의 반러 정서는 상당히 강한 편
- 야누코비치는 내각 및 주요 국가 기관에 자신의 출신지역 인사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서부 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유도

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

- 러시아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안보 면에서 핵심 국가 중의 국가
 - 소비에트 연방 출범 시 레닌은 “우크라이나 없는 소비에트 연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며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
 -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에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독립 당시 흑해함대 분할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있었으나 야누코비치 집권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2042년까지 장기 임대 계약 성공
 - * 크림반도 내 호바르디스케 및 카차에도 러시아 공군기지 유지
- ※ 만약 러시아가 세바스토폴 흑해함대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러시아는 북해 바렌츠 해로부터 남쪽 국경까지 지중해 및 대서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모든 해로가 차단됨.
-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그루지야와 몰도바의 나토 가입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상실로 귀결
 - 러시아는 ‘군사독트린’ 등 공식 국가 문서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구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며, 나토 가입 저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
 - 유럽지역에 위치한 구소련 공화국들이 나토에 가입하고, 미국의 MD기지가 건설될 경우 체코 및 폴란드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MD기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러시아의 타격이 예상됨.

*러시아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안보 면에서
핵심 국가 중의 국가.
러시아는
‘군사독트린’ 등
공식 국가 문서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구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며,
나토 가입 저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

마. 탈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한계

- 역사적 유산으로 인한 한계
 -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이 동부에 이주하면서 일정 정도 세력을 형성
 -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정권 시대에 친우크라이나 정책을 수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고학력, 인텔리 계층이 대거 러시아에 이주하면서 친러시아 세력을 형성

러시아의 의지:**우크라이나는 안보적****측면에서 러시아의****사활적 이익이****걸려 있는 국가로서****러시아는 결코****우크라이나에 대한****자국의 영향력 상실을****묵과할 수 없는 입장**

- 경제적 종속
 - 현재 우크라이나의 총부채는 약 73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30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채권을 러시아가 보유
 - 우크라이나는 석유 15%, 가스 25% 정도만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러시아로부터 도입
 - 친러시아계를 표방하는 동부지역의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서부 지역은 농업에 크게 의존
 - 동부에 위치한 도네츠크주는 우크라이나의 전체 세금의 1/4을 납부
- 러시아의 의지
 - 우크라이나는 안보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국가로서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상실을 묵과할 수 없는 입장

2. 러시아의 크림 합병**가. 푸틴 대통령 크림 합병을 최종 승인**

-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비준한 러시아의 크림 합병에 대한 비준을 푸틴 대통령 최종 승인(2014.3.18)
- 푸틴 대통령의 최종 승인으로 인해 크림반도와 흑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세바스토폴시는 사실상 러시아로 귀속
- 러시아는 크림 합병에 대해 크림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억압도 없었으며,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
- 러시아 정부의 신속한 크림 합병에 대해 러시아 언론들은 ‘미국과 서방이 크림합병을 러시아가 단순히 협상 카드로 연계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의 전격적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 고조 (Rossiskaya Gazeta, 2014.3.19.)
-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림 합병 이후 80%를 상회하는 가운데 일단 러시아 국내정치의 카드로는 유효하게 작용

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배경

- 러시아는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고유 영토이며, 흐루쇼프에 의해 우크

라이나에 귀속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으로 존재하던 것과 소 연방 해체 이후는 상황이 다르다는 논리

○ 크림공화국의 주민 투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

- 러시아는 코소보 독립을 예로 들면서 코소보 주민들만의 투표로 독립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과 크림 독립을 위한 주민 투표를 동일하다고 인식

○ 러시아 정부가 크림반도 합병을 신속히 결정한 것은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 이익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 필요했기 때문임.

- 러시아 국가 공식 문건에 구소련권 지역은 러시아 안보에 대해 사활적인 지역으로 천명하고, 이 지역이 적으로부터 피침 당했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

☞ 러시아는 그루지야 사태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서방이 예상하지 못했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안보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다른 구소련권 국가들에게도 경종

다. 러시아의 기습적 합병에 대한 미국 및 서방의 입장

○ 미국 및 서방의 지도자들은 가히 전격적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의 크림 합병에 대해 사실 크게 허를 찔린 듯한 상황

-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학자들 역시 러시아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 발생

○ 미국 및 서방은 크림 주민 투표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모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 경고

○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수위 및 효과 등에 대해 고심

- 러시아를 제재할 경우 ‘부메랑 효과’에 의해 러시아의 보복 조치와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

라. 미국 및 EU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평가

○ 결정적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서방국가들의 제재는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

*러시아 정부가
크림반도 합병을
신속히 결정한 것은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 이익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
필요했기 때문임*

**미국과 EU의 제재는
현재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러시아 역시 초기
제재에 대해서는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

-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EU의 제재는 러시아의 핵심 정치·경제인 및 기업으로까지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제재 효과는 미흡하다는 평가 우세
 - 미국과 EU의 제재에 대해 러시아 정부 및 제재 대상자들의 반응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 미국 내 언론 역시 “slap on the wrist(숨방망이)” 수준의 미봉책이라고 평가
 - G7,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를 담은 ‘헤이그 선언’ 채택
 - 핵안보 정상회담 기간 중 미국의 제의에 의해 러시아를 제외한 G7 정상은 러시아를 G8 정상회담에서 당분간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사실상 소치 G8 정상회담을 거부
 - 러시아가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에너지, 금융, 국방 등 러시아 경제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제재 함의
- ☞ 미국과 EU의 제재는 현재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러시아 역시 초기 제재에 대해서는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

3.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정세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 크림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리 독립운동 내전으로 비화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리주의자들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 유혈사태 격화
- 5월 25일 대선에 의해 포로셴코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나, 내전은 오히려 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미국과 서방은 동부지역 유혈사태에 대해 무기 제공 등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러시아의 자제를 촉구
 - 러시아는 동부지역 유혈사태에 개입을 부인

나. 미국 일극주의의 약화

- 탈냉전 이후 미국의 일극주의에 대한 첫 도전
 - 미국이 경쟁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탈냉전 이후 초유의 상황

- 지역 강국들의 배타적 영향력 확인
 - 중국, 러시아가 자국의 배타적 영향력을 인정받기 원하는 지역에서 국제사회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할 경우 대응책 미흡
- 중남미 지역 좌파정권의 영향력 확대 도모 가능성
 -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던 중남미 국가들 중 미국의 지도력 약화를 계기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원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단결 가능성 고조

다. 동구지역에서 러시아 영향력 증대

- 구소련권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
 - 구소련권 국가 중 탈리아를 원하던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등은 조심스럽게 정책 검토 가능성
 - 중도 노선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절감하고 친러 방향으로 정책 조정 가능성 전망
-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연합(EEU) 확대 가능성
 -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가입하고 있는 경제 연합체인 EEU에 중도 성향의 국가들의 가입 가능성 증대

유라시아연합(EEU): 2011년 10월 당시 푸틴 총리에 의해 제안된 구소련권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 다극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러시아의 포석이며, 2015년까지 단일 화폐 도입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미국이 경쟁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탈냉전 이후 초유의 상황

- 동구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증대 가능성
 -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구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Rossiskaya Gazeta, 2014.3.20)
 - 경제적 영향력 증대뿐 아니라 안보적 영향력 증대에도 러시아는 관심을 가지며, 체코, 폴란드에 MD 기지 건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

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인한 국제 현안 문제 해결 지연

- 이란 핵문제 및 시리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가 서방과의 대립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 예상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란 핵협상을 우리 명분 쌓기에 이용할 뜻은 없지만 미국과 EU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면

**실리적 차원에서
한반도 정책 변화를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던 러시아가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할
가능성 농후**

여기서도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NYT, 2014.3.20)

- 시리아 문제에 있어 러시아는 알 아사드 정권을 계속 지지하고 있어 문제 해결 난망

- New START 협정 폐기 우려
 -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할 경우 New START 협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 '핵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바마 정권에 타격 예상

New START 협정: 1991년 START(전략무기 감축협정)가 미소 간에 타결되고 2010년 미러 간 체결된 새로운 포괄 핵무기 감축협정. 협정에 의하면 2018년까지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기 이하로 감축

-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협조 가능성 하락
 - 실리적 차원에서 한반도 정책 변화를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던 러시아가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할 가능성 농후

4.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향후 전망

가. 미국 및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 미국은 러시아에 군사적 제재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표명하 이상 강압적 외교 수단으로는 경제제재 이외 대안이 없는 상태
- 미국이 이란 제재에 활용하였던 금융제재를 러시아에 대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 자국 은행 및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과 은행들로 하여금 러시아와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도록 완벽하게 강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금융제재 지지자들 중 강경파는 러시아의 국제적 불법 금융활동을 고발, 중단시키기 위해 화폐 위조, 부패, 탈세, 조직적 폭력 등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상존
 -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세계적 캠페인은 전 세계 국가들의 협조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제대로 작동시켜 효과를 보려면 절대적 시간이 필요
 - * 제재국들의 위협도도 높으며 러시아의 보복도 고려

- 미국의 제재 강도와 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EU가 미국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EU의 제재 수준이 낮을 경우 러시아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 유지 노력

-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유럽지역에 보다 공세적인 군사정책 수행 가능성 증대
 - 2007년 러시아는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협정(CFE)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데 이어 2013년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M’ 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정

이스칸데르-M 전술 미사일: 사정거리는 500km이며, 미사일 방어망과 대공 방어망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초음속 미사일. 가장 큰 특징은 비행 궤적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임.

- 우크라이나 신정부에 대해 가스비 인상, 동부 지역 문제 등을 놓고 압박 가속
 - 러시아는 현재 친서방적인 우크라이나 신정부가 러시아와 반목하는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으며, 신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서방과 협상
 - 러시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세력을 지렛대(leverage)로 활용 가능성 농후

다. 미국 및 서방의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

- 러시아의 경제침체 가능성
 - 미국 및 EU의 경제제재가 실현될 경우 성장 동력의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불안요인으로 작용
 - * 외국 자본의 급속한 이탈 및 국제 신용 평가 하락
- 국가목표 달성 난망
 - 러시아 경제의 침체는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서의 목표 수정을 야기할 가능성 농후
 - 군사력 증강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목표 변경 불가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유럽지역에 보다 공세적인 군사정책 수행 가능성 증대. 우크라이나 신정부에 대해 가스비 인상, 동부 지역 문제 등을 놓고 압박 가속

현재 러시아는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관찰시키기는 쉽지 않으며, 미국 및 서방도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파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 저하
 - 러시아도 서명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관한 양해각서를 직접 파기할 경우 러시아의 국제 신뢰는 크게 저하될 전망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배치된 구소련의 핵탄두 및 ICBM 등의 발사체를 모두 폐기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 및 프랑스 4개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한다는 문서

라. 향후 전망

- 현재 러시아는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관찰시키기는 쉽지 않으며, 미국 및 서방도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현재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몰도바의 트랜스니스트르 지역도 병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러시아는 위 지역을 서방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로 활용 가능
- EU는 국가마다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러시아를 강력하게 제재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EU 및 나토 가입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 * 우크라이나라는 ‘짐’ 하나를 더 짊어질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과 우크라이나의 자유가 국가 전략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 작용(Rossiskaya Gazeta, 2014.3.19)
 - 러시아에 대한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
- 미국은 당분간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판단
 - EU 국가들과는 달리 미러 간 무역량과 에너지 의존도 낮음
 - 탈냉전 이후 체제에 대해 러시아가 반발하는 현상에 대해 미국이 소극적 대처를 할 경우 자국의 위상 저하 인식
 -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위반한 러시아를 미국이 용인할 경우 다른 악성 국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을 우려

5.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여파로 인해 전반적인 한러관계 악화 가능성

-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안에 관해서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으며, 당분간 한러관계 악화 가능성 농후
-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역시 실현 가능성 저하
 - 철도, 가스, 북한 지역 전력망 건설 사업 등 러시아의 절대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차질 예상
-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의 협조 기대 난망
 - 2010년경부터 지속되어 온 러시아의 대한반도 실리외교가 또다시 정치적인 고려로 전환 가능성

나. 중러관계 강화

- 중국이 자국 내부의 문제로 인해 러시아의 크림 합병에 대해서는 암묵적 지지
- 중러 간 경제 및 안보협력,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감안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EU에 이어 러시아의 2번째 교역 상대국이며,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양의 원유 및 가스를 도입
-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반도 유사시에도 작동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주변국 관계 강화 증대 필요

다. 북한 급변사태 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

- 현재 러시아는 나진항 50년간 임차, 나진-हत산 간 철도 개통 등 북한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어, 한반도 급변사태 시 자국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적극적인 군사개입 가능
 - 한반도 급변사태 해결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농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의 협조
기대 난망.
2010년경부터
지속되어 온 러시아의
대한반도 실리외교가
또다시 정치적인
고려로 전환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북한의
핵 폐기 관련 대북
협상에도 악영향
파급 전망.
핵 폐기를 대가로 한
안전보장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라.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음에 유의

-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북한의 핵 폐기 관련 대북 협상에도 악영향 파급 전망
 - 핵 폐기 대신 안전보장을 담보 받았던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침공을 당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음
 - 리비아 및 이라크 사태를 보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농후
- 핵 폐기를 대가로 한 안전보장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마.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중견국가들의 자주권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

- 국제정치에서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은 중견국가의 주권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군사적, 외교적 대비 철저 필요

◆ 저자 약력

■ 유영철

現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에서 근무.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모스크바 청년대학(구 콤포몰 대학),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 안보, 군사, 북러관계 등을 주로 연구하였음. 최근 연구로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방안’, ‘한러 정상회담 분석’, ‘CIS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한낙훈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